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2

인물로 본 우리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차

1990~1992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5
군사정권 시기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사찰 고발 6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투표부정고발 7
	한준수 군수의 지자체 동원 관권선거 고발 8

례

1993~1997	정광용 보육사의 공공복지시설 횡령 제보 11
문민정부 시기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12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13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감사비리 고발 14

1998~2002	고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예산낭비 고발 17
국민의 정부 시기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부조리 고발 18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18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19
	조성열 씨의 수서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리 고발 20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공항 부실시공 고발 21
	정국정 전 엘지전자 직원의 사내 감사팀 제보에 대한 보복 피해 22
	차원양 소장의 육군 긴급인사 실상 고발 23
	조주형 대령의 F-X 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 고발 24
	최강욱 군 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비리 내부고발 25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 집행 제보 26
	지용호 씨의 지방공사 의원원 비리 고발 27
	진웅용 교사의 사립학교 비리 고발 28

2003~2007	고성균청 이정구 씨의 군수 비리 제보 31
참여정부 시기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혈액관리 비리 고발 32
	동일여고 교사들의 사립학교 비리 고발 33
	김이섭 연세대 감사의 연구비 횡령 고발 34
	김중년 행정실 주사의 영덕여고 비리 고발 35
	조태욱 KT 직원의 KT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36
	여상근 KT 지부장의 예산낭비 고발 37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의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문제점 지적 1인 시위 38
	○○○ 연구원의 황우석 박사 관련 PD수첩 제보 39
	박경욱 씨의 밀라노 프로젝트 횡령 고발 40
	전응식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41
	양시경 감사의 JDC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42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42
	권태교 씨의 버스회사 요금 횡령 제보 43
	황규한 전 이스라엘대사관 참사관의 대사관 내 비리 공익제보 44

2008~2012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47
이명박 정부 시기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대운하 관련 양심선언 48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49
	김동일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의 국세청장 비판 50
	김중익 씨의 민간인 사찰 불법사찰 피해 폭로 51
	이용석 교수의 SK텔레콤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 로비 제보 52
	이두희 씨의 군중서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고발 53
	신춘수 씨의 KTX열차 원인 사고 제보 54
	유영호 김리단장의 군산 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55
	윤승훈 씨의 서울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전류사고 제보 56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비위행위 제보 57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역역 살처분 허위신고 권익위 공익신고 58
	홍서정 씨의 학교 내 종교수업 강제에 대한 언론 공익제보 59
	심태식 민경대 선생님의 학교 물품구입 등 부정행위 지속적 감시제보 60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양심선언 61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의혹 제기 62
	충주 소각장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공익제보 63

우리 사회의 변화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노력이 있었고,
그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익제보자들이다.

하지만 마땅히 칭송받고 존경받아야 할 공익제보자들은 조직의 배신자 짬으로 여기는 시선은
여전하고,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하다.

물론 2011년 10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는 법적 제도적 측면
에서 점점 진일보하여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공익제보자들은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거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복
직을 하거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
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는 새로운 유형의 공익제보자도 여럿 생겨났다.

공익제보는 내부자 간의 공모와 담합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패와 비리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과 같은 존재이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
심의 호루라기를 분 진정한 의인이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제보는 더욱 장려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 자료집은 우리 시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의인들에 대한 작은 기록이다. 지난 2010년 제 1
회 공익제보자의 밤을 준비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한국 공익제보의 역사를 사건과 인물을 중
심으로 정리하기 위해 처음 발간되었다. 2012년 판에는 기존 자료집에서 빠진 내용을 보완하
고 2012년의 새로운 공익제보자들을 추가했다.

아직도 책에 미처 담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훨씬 많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정의와 양심의 목소리를 낸 모든 공익제보자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친다.

2012.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1990 - 1992
군사정권 시기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23개 재벌계열사의 비
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
되었음'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하였다. 한겨레는
이를 1990년 5월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보도하
였다.

이 감사관은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사원 측에 스스로 밝혔고, 감사원은 잘못을 시
인하는 각서 작성과 사표를 중용하였다. 대검찰
청 중앙수사부는 이 감사관이 실제 내용과 크게
다른 자료를 언론기관에 유출하여 정부의 공신
력을 떨어뜨렸다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하
였고, 감사원에서는 문책성 인사에 대한 반발로
누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전 감사관의 제보 동
기의 순수성을 훼손하였다. 또한, 해당 사실에
대해서 감사원과 서울특별시는 부인했다.

이 감사관은 구속적부심의 심리 과정에서 8대
의혹을 추가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인정하지 않
았으나 이후 이 내용 중 상당부분이 잇따라 사
실 또는 사실에 근접한 내용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경유착에 대한 세간의 의심이 사실로 판명되
면서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 감사
관은 구속과 파면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후 6
년간의 긴 법정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
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감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
해 “고발한 내용은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
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
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
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이 감사관은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청
구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감사원으로 복직, 감사
교육원 교수로 근무하다가 지난 1999년 정년퇴
직하였다. 시사저널 ‘올해의 인물’(1990), 한국기
자협회 전국기자가 뽑은 올해의 인물(1990), 브
리태니커 세계연감 '1996년의 화제의 인물'로 선
정되었으며 민주노동당 부대표 및 부패추방운동
본부 본부장,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공익제
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사찰 고발

윤석양 이병은 1990년 10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보안사가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자유당(민자당) 최고위원, 김수환 추기경 등 약 1,300여 명의 민간인에 대해 불법적인 사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

윤 씨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과 4학년 재학 중 학생운동과 관련해 제적당했고, 군 복무 중이던 1990년 7월 혁노맹 사건 피의자로 보안사에 연행됐다. 그는 ‘프락치’로 일하라는 강압적인 권유 끝에 혁노맹 조직원 김거를 위한 ‘수사 협조’를 시작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중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탈출했다. 윤 씨는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개인신상 서류철, 컴퓨터 디스켓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국방부는 윤 이병이 제시한 민간인사찰의 명백한 증거들에 대하여 대변인을 통해 ‘전시나 계엄령이 선포된 때에 대비하여 적 또는 불순세력으로부터 대상자들을 보호 및 차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일개 이등병이 나라를 뒤흔드는 사태를 개탄하면서 운동권세력과 연대한 행위로 그 동기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는 민간인 사찰을 시인하였으며, 국방부장관과 보안사령관이 해임되었다. 보안사령부는

기무사령부로 개명했다. 윤 씨는 기자회견 후 특수군무이탈혐의로 수배되었다가 2년 만인 1992년 9월 체포되어, 이듬해 군 사법부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공주교소도에서 만기 복역 후 1994년 만기출소하였다.

1998년 대법원은 보안사의 사찰 대상자였던 한승헌 감사원장과 김승훈 신부 등 1백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과 수사 활동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보안사가 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어 군과 무관한 정치인, 종교인, 교수 등을 지속적으로 사찰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이상훈 장관은 해임 이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대통령자문 국민원로회의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조남풍 보안사령관은 해임 이후 제1야전군사령관(대장), 2004년 제17대 총선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을 역임했다.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투표 부정고발

이지문 중위는 1992년 3월 2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선협)에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공개투표·대리투표행위와 여당지지 정신교육이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 이 씨는 당시 육군 9사단 소속이었는데 국방부는 이 씨를 무단이탈로 구속하였다.

국방부는 해당부대의 500여 명 장·사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위의 증언이 허위라고 밝혔다. 또한, 고발동기에 대해서도 좌익운동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공선협>과 언론사 등으로 200여 명의 현역군인들이 익명으로 군부재자투표부정에 대해서 제보를 하였고, 특히 통신사령부의 이원섭 일병의 추가 고발로 국방부는 여당지지 정신교육과 대리투표행위가 몇몇 부대에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방부는 대리투표 지시혐의로 중대장 2명만 기소했다.

이 씨는 기소유예로 석방된 후, 이등병으로 파면 조치되었으나 4년 여의 법정투쟁 끝에 전역 군인들이 이 중위의 고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여 199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파면처분 취소확정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전역을 하였다. 이 씨의 고발 이후 군부재자 투표 제도는 영외투표로 개선되어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다.

이 씨는 1991년 ROTC로 임관하기 전 ROTC 200명과 함께 삼성그룹의 장교 특채로 입사했으며 전역 당시에는 장교신분으로 전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취소 이후에는 2년 6개월간의 휴직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2010년 6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삼성그룹에 복직권고를 했으나 9월 1일 삼성전자로부터 복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현재 연세대 등에 출강하며 다른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준수 군수의 지자체 동원 관권선거 고발

한준수 충남 연기군수는 1992년 8월 31일, 같은 해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관권·금권선거에 대한 비리를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통해 고발하였다. 정부에서는 야당에서의 고발을 문제시하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흑색폭로라면서 고발내용을 전면 부정하였으며, 인사 불만에 의한 작위적 폭로라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도지사가 제출한 수표 등 부정선거를 짐작케 하는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전면 부정하지 못하고 결국 충남 연기군에 국한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축소하여 한 군수와 이종국 충남도지사, 임재길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 받았다. 한 군수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한 군수의 고발 후 김영삼 당시 민주당대통령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중립선거관리내각 구성을 위한 부분 개각”을 요구했으며, 노태우 대통령은 관권선거 개입의 폐습을 청산하겠다는 명분으로 여당을 탈당하였다.

한 군수는 1995년 2월 대법원 판결에서 총선 당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역 주민에게 물품과 돈을 건네준 행위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선거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패소판결을 받았다. 한 군수와 이종국 충남도지사, 임재길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은 1995년 광복절에 3명 모두 사면 받았다.

1993 - 1997
문민정부 시기



정광용 보육사의 공공복지시설 횡령 제보

정광용 씨는 1994년 3월 한국발달장애센터 해인원(현 동산원)의 비리사실을 「함께 걸음」과 「장애인복지신문」이라는 장애인 관련 월간지와 신문에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였다.

해인원에서 보육사로 근무하고 있던 정광용 씨는 “해인원이 정신지체아들을 수용하면서 보호자들로부터 친권포기 각서를 받은 후 그 정신지체아들을 무연고자로 신고하고, 보호자들로부터는 처음 해인원에 입원시킬 때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이를 사적으로 횡령하였고, 매달 일정한 후원금을 받아 이를 해인원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애인 관련 월간지와 신문에 제공하였다. 친권포기각서에는 “해인원에 수용된 장애아동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당시 언론은 보도했다.

최창수 당시 이사장의 지시로 1994년 3월 문서창고 정리 작업이 있었고, 친권포기각서, 예금통장 등을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우연히 시계를 찾으러 소각장을 찾은 정씨가 타다 남은 문서를 주웠다. 당시 총무로부터 버리라는 지시를 받은 정씨는 이들 문서를 복사한 뒤 폐기했고 정 씨는 최창수 당시 이사장의 운영비리를 세상에 알렸다.

정 씨의 공익제보로 1994년 9월 이사장이 바뀌었고 10월에 원장이 새로 부임했다. ‘해인원’의

이름도 ‘동산원’으로 바뀌었다. 정씨는 경영비리와 보육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정씨등 보육사 4명이 1994년 10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광주군청에 제출했다. 새로 부임한 서정희 이사장은 이들 5명을 해고했고 보육사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광주군청 복지시설 담당 석경자씨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

서 이사장은 신임 원장 김순희씨에게 정씨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라고 요구했고, 정씨가 해인원 사무실에서 서류함을 드라이버로 부순 뒤 친권포기각서와 통장 등을 훔쳐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서류함을 부순 것은 열쇠를 잃어버린 김순희 씨였고 김순희 씨는 1995년 1심 재판도중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서 이사장의 강요로 사실을 왜곡하여 고소했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용상 판사는 1995년 5월 23일 한아무개 보육사의 증언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징역 6개월 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후 1995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1년 7월 <한겨레 21>의 보도에 따르면 정씨가 제기한 전임 최창수 이사장의 횡령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나 수사받은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고, 서 이사장의 무고죄 또는 교사죄에 대해서는 수사 받지 않았다.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김석원 경장은 서울 양천 경찰서 신정1파출소에 근무하던 1994년 8월 당구장을 비롯하여 관내 업소로부터 경찰관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받아왔으며, 그 대가로 시간외영업과 미성년자출입 등의 불법영업을 묵인해주었다는 사실과 파출소가 경찰청 감찰계와 감사원에 운영경비를 불법 지출하고 있음을 언론에 제보하였다.

김 경장은 파출소 내의 이런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자 동년 6월 상급관서인 양천경찰서에 보고하였으나, 오히려 직원 융화를 해쳤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제보 이후 경찰청은 파출소 소장폭행, 금품수수 등 김 경장이 제기한 개인비리와 고발내용이 대부분 허위로 드러나 이로 인해 직원들 간 화합을 해쳤다는 이유로 파면 조치했다. 그러나 김 경장이 제기한 파출소 운영 경비 불법지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뇌물 역시 김 경장만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후 파출소 운영경비 유용문제가 경찰청 감찰요원들의 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되었지만, 역시 이로 인해 인사상 처벌을 받은 사람 없이 끝이 났다.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납품비리 제보

김필우 씨는 웅진축협 백령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1994년 10월 백령도에 상주하는 해병 6여단에 부식을 납품하던 웅진축협이 군부대 보급참모, 선임하사 등과 짜고 현품을 납품하지도 않고 납품한 것처럼 각종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9천 5백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참여연대를 통해 공개하였다.

김 씨는 참여연대에 공개하기에 앞서 직속 상급자에게 전말을 보고하였으나 묵인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1993년 11월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축협으로부터 갖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고발 이후 김 지소장은 본래직급인 상무대리에서 일반창구직원으로 강등당하는 등 계속적인 보복성 인사를 당해오다 1995년 9월 부천축협에서 면직되었다. 이러한 인사행포에 맞선 소송 끝에 1996년 11월 ‘부당전직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더 이상 이런 조직에서 일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김 씨는 이후 2002년 인천시의회 의원이 되어 서해 5도 주민의 배 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을 위한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웅진축협 관계자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납품비리 공범인 해병대 장교와 부사관은 1991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전역했다.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감사비리 고발

현준희 감사원 주사는 1996년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효산그룹 콘도 허가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다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양심선언 하였다. 현 씨는 기자회견에서 “효산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그 결과 효산은 지가 상승과 부대시설 사업 수익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는 것을 밝혀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이들의 예금계좌와 외압 여부 등을 추적하려던 단계에서 갑자기 사건을 다른 국(局)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결국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 라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의 기자회견 이후 효산 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건설공사도 취소되었으며, 제일은행이 효산에 특혜 대출한 사실 등이 밝혀져 현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이 수천만 원을 받았고 김영삼 대통령과 차남 김현철 씨의 측근들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현 주사의 주장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폭로해 공직자 품위와 감사원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조치를 하였고, 감사 중단 지시자로 지목한 감사원 간부에 의해 현 주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다.

이 고소 건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김창준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아 1996년 1심 재판 이후 무려 12년간의 지난한 법적 투쟁 끝에 승리했다.

현 씨는 1997년 1심 재판에서 승소, 2000년 2심에서 승소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2002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다. 이후 4년 간의 지난한 과정 끝에 2006년 10월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무죄 판결을 받고 2008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 씨의 양심선언은 헌법상 독립적·중립적 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면처분취소소송은 재심 청구 후 다시 패소해 그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

1998 - 2002
국민의 정부 시기



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예산낭비 고발

박대기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은 1998년 2월 외국 무기부품 구매과정의 예산낭비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조달 업무를 맡아오던 박 씨는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벌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오히려 면박을 주거나 냉소를 보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도개선을 건의한 다음에는 더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1997년 한 해에만 보직이 세 번이나 변경되기도 하였다. 국방예산 낭비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서 박 담당관은 1998년 2월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공개하였으며, 당시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행정과 도서 실 사서업무를 맡게 되었고, 결국 1998년 9월 명예퇴직하였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병환으로 운명하였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박 담당관이 주장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그의 고발로써 연 3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부품 구매과정에 대해 감시의 눈길이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3월에는 감사원이 국방부 조달본부가 65센트짜리 헬기 수리용 나사를 2,300배가 넘는 1,500달러에 수입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부조리 고발

정경범 지방교육행정주사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을 지내고 퇴직한 1998년 5월 『나의 31년 공직생활, 부끄러운 부정부패 일기장』이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비리를 포함,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고발하였다.

정씨는 이 책에서 일선학교의 인사부조리에서부터 각종 공사와 학교급식을 둘러싼 비리, 학교비자금 조성방법, 교육청 종합감사 시 감사직원에게 학교공금으로 접대비 지불 등 교육현장의 갖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광주지검 특별수사부는 동년 10월 책에서 고백했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정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나, 법무부의 ‘내부공익제보자는 죄를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는 방침과 ‘횡령한 돈을 되갚고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석방하였다.

김찰은 책자에서 언급된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 서부교육청 관리국장과 초등학교 교장을 구속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자체감사를 벌여 비위사실이 드러난 초등학교 교장 3명과 서부교육청 서기관 등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는 1998년 참여연대 소식지 ‘개혁통신’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의약품구매 관련 비리를 제보했다. 병원에서 약을 구입할 때 어떤 약이 병원에 새로 들어가려면 제약회사는 ‘오펙비’라는 채택료를 내야하고, 그 후에도 상납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병원들이 비싼 3차 항생제부터 쓰는 일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고발했다. 의사협회는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동료들의 반응도 냉담했다.

김 교수는 의료보험 약가가 실거래가격보다 매우 높게 책정되고 있으며 제약회사들이 제출한 원가계산자료를 바탕으로 의료보험약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이 위원회가 보건복지부나 의료보험공단 이 아닌 제약협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책을 만들었다. 그의 문제 제기 이후 보건복지부는 그의 제안을 수용하여 의보약가 실사에 착수했고 전제 의보약가를 평균 30.7% 인하했다. 또, 제약협회에 위임됐던 의료보험약가심의위원회도 복지부 산하로 가져왔다.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조항민, 석명한 씨는 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 검수원들로 ‘도시통근형 동차 및 새마을 열차의 보수품 유용과 하자보수의 문제점과 축상발열로 인한 열차 탈선사고 위험’을 1998년 10월, 12월, 99년 1월에 <도시연대>와 「한겨레신문」에 제보했다.

철도청은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보다는 제보자를 알아내는데 주력해 결국 99년 4월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로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씨는 파면조치를 하였으며 조항민, 석명한 씨에 대해서는 감봉과 지방전출 조치를 했다.

황효열, 윤윤권 씨는 2000년 5월 법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받아 복직하였다. 그러나 황하일씨는 2001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철도차량의 안전문제를 외부에 알린 공익적 제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2002년 7월 대법원에서는 철도청 쪽에 손을 들어 주어 파기환송되었고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

한편 복직했던 황효열, 윤윤권 씨에 대해서 철도청은 다시 3개월·2개월 정직의 재징계를 하였다. 소청을 가서 각각 3개월 감봉 및 2개월 감봉으로 결정되었으나, 철도청은 이들을 타 직종으로 전출 보냈다. 또한 감봉·전출 징계를 받았던 조항민 씨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조성열씨의 수서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리 고발

조성열 씨는 수서 청소년수련원을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상회원 직원으로 참여연대에 비리행위를 제보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서울시에 시민감사청구를 했다.

그의 제보에 따르면 상회원의 이사장 유호준은 조성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4년간 수련관의 체육관, 소극장, 식당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 중 일부를 수시로 입·출금하여 1억 2천 여 만원을 조성한 뒤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조 씨는 비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상태였다.

시민 감사관은 유호준의 비리행위와 약 2억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냈고 적발된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변상과 수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상회원에 대한 허가 취소, 증여받은 광업권의 권리보전 절차 이행 대책 마련 등을 서울시에 권고하였다.

서울시는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법인을 변경하고 유호준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유 이사장에게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통장을 만든 조 씨만 기소돼 2001년 11월 25일 서울 형사 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유호준 상회원 이사장은 이사장 취임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을 역임하고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건국5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명예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고 2003년 사망했다.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 신공항 부실시공 고발

정태원 감리원은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3년 간 감리원으로 일해오던 중 2000년 7월 경실련을 통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공사 감리 과정에서 내화·불연·방수처리 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부실 사례와 부적절한 설계변경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으나 감리단이 이를 덮어왔다”면서, 공사 현장의 자재 샘플과 직접 채집한 비디오테이프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최우수 감리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정 씨는 부실공사를 따지는 감리원들을 시공사 직원이 폭행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2000년 5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주고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시공사 측의 조직적 반발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공사 측에서는 부분적으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모두 시정 조치했기 때문에 전체 공정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객터미널 방수재 선정의 문제로 인한 방수기능 결함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씨는 고발로 인해 평생 업으로 삼았던 건설업계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

정국정 전 엘지전자 직원의 사내 감사팀 제보에 대한 보복피해

정국정 씨는 엘지전자라는 국내 굴지의 기업에 취업하여 사내 청년임원회의에 발탁되는 등 적극적 열의를 보이며 직장 생활을 하던 중, 1996년 11월 회사 구입 자재가 고가로 매입되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가는 비리를 발견해 회사 감사팀에 이 사실을 제보하였다. 그의 제보는 구매 담당자와 납품업자가 징계를 당하고 8천 500만 원이 회수되는 성과를 남겼다.

그런데 그렇듯 회사에 충성했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포상이 아닌 불이익이었다. 익명이 보장되지 못하고 제보자가 드러난 것이다. 그는 2년간 연거푸 승진에 누락된 후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퇴직원을 강요받았다. 회사는 그가 퇴직원 제출을 거부하자 그를 대기발령낸 후, 폭행과 전자메일ID 몰수, 사물함 회수 등으로 괴롭히다 그를 따돌릴 것을 지시하는 메일을 사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정 씨는 결국 무단 외출이라는 명목으로 2000년 징계 해고되었다.

그는 이후 12년 간에 걸친 복직 투쟁을 전개하였다.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졌지만, 결국 해고

무효확인 민사소송이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면서 최종 패소하였다.

한편, 그 소송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정국정 씨를 도와 2012년 4월 5일 고현철 전 대법관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고 변호사는 대법관 재직 시인 2004년 2월 27일, 정국정 씨가 중앙노동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엘지전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결 취소소송(사건번호 2003두 13601)에서 재판장으로서 상고기각(정국정 씨 패소)했는데, 대법관 퇴임 후 정국정 씨가 엘지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등 무효확인 소송(사건번호 2010다21962)에 엘지전자 대리인으로 수임(2011년 2월 18일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하여 2011년 3월 24일 고법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정국정 씨 패소)을 이끌어 낸 것은 변호사법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 조항 위반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묵묵부답이다.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2001년 10월 1일,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 차원양 소장은 국방부 홈페이지 열린 게시판에 ‘불합리한 육군 진급 인사 실상을 고발함’이란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비록 익명이었지만 현역 장성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육군의 진급심사제도를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차 소장이 올린 글은 바로 삭제되었지만 이 글은 토론방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후 10월 9일 국방부가 육군 진급심사제도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현역 장성 C씨를 보직해임한다고 발표하면서 차 소장의 신분은 노출되었다.

차 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소령 이하의 하위 계급은 ROTC 및 3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령이나 장군 등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육사 출신의 비율이 높아지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에는 44명의 장군 진급자 중 육사출신이 31명, ROTC가 5

명, 갑종(3사가 생기기 이전의 장교 임용제도) 8명으로 균형을 유지했는데 국민의 정부 들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 출신이 진급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전체 진급 인원 중에서 육사 출신을 몇 명 진급시킬 것인가를 사전에 참모총장의 사전 결재 아래 결정해 놓고 잔여분에 한하여 ROTC, 3사 등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급 공석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문제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차 소장은 국방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지 3주 후 전역 지원서를 내고 2001년 11월 10일, 34년 간의 군 생활을 정리했다. 그러나

현재 차 소장은 전역 후 대학 강의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문제제기 이후 군 인사체계가 크게 개선된 점에 만족하고 있다.

조주형 대령의 F-X 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 고발

조주형 대령은 F-X 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2002년 3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의 선택을 기정 사실화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 과정과 그 결과의 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한 조 대령이 균형법의 군사상 기밀누설 및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후 조 대령의 가족과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월 초 F-X사업의 책임자인 국방부의 최 모 획득실장이 F-15기가 선정되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큰일이라는 압력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조 대령 육성 녹음테이프를 공개했다.

군에서는 조 대령이 기종 선정에 참여했던 다른 회사의 로비스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그의 고발을 파렴치한 행동으로 몰아붙였으며 제보 내용을 전적으로 부정했다.

조 대령의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F-X 사업 기종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미국이 자국 내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F-15K의 선정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과 이를 위해 국방부가 평가 기준을 조작하

려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조 대령은 40여 일 동안 수사를 받고 4월 16일 F-X 기종선정 발표 직전에 기소됐으며, 군사법원에서 군사기밀 누설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공군참모총장에 의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이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조 대령은 상고하였으나, 2004년 2월 13일 대법원 2부는 “군사기밀이란 법령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때 상당한 이익이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피고인이 시험평가 결과 라팔이 F-15K보다 우수하다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준 것은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였다.

조 대령의 폭로는 국방부에서 미 보잉과 벌인 F-15K 가격협상에서 2억달러를 깎는데 기여했다. 당시 국방부 최동진 획득실장은 퇴임 이후 2008년부터 한화(HWC) 사외이사에 재직 중이다. 당시 신보현 공군 차기 전투기 사업평가단장은 전역이후 건국대 무기체계개념 개발응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최강욱 군 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비리 내부고발

2002년 10월 8일 참여연대는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준장, 이하 법무관리관)을 형법상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4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모니터 과정에서 발견된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검찰수사비 횡령, 직권남용혐의와 관련 제보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에게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해 왔다.

참여연대는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혐의가 육군법무감으로 근무하는 22개월 동안 검찰수사비 총 1억 6천여만 원 횡령, 허 모 준위 군용물 절도 사건 청탁 개입, 서 모 중령 군용물 횡령 사건 개입, 이 모 준장 뇌물 수수 사건 개입 등이라고 내용과 증거자료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데, 이는 당시 군 법무관이었던 최강욱 씨가 내부고발한 자료를 기본적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후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2003년 7월 국방부로부터 보직해임조치라는 사실상 전역 조치를 받았고 11월 말 전역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다.

최강욱 군 법무관은 전역 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 집행 제보

김봉구 씨는 2002년 참여연대와 함께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 부당집행에 대해 고발했다. 1997년부터 안산시청 시설공사와 계장으로 일하고 있던 김 씨는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IMF 사태로 건립비용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안산시장의 실시 설계까지 함께 하라는 지시는 실시설계비용 38억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사표명 이후 부시장과 설계 용역업체 사장의 심한 욕설과 모욕이 이어졌으며, 항명을 이유로 상수도사업소로 좌천되었다. 김 씨가 발령된 후 종합운동장의 실시 설계가 다시 진행되었고, 김씨는 2002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안산시의 이런 행태를 고발했다. 그러나 안산시 측은 김 씨를 동사무소로 발령 냈으며, 김 씨는 이를 부당한 보복인사 조치라며 부패방지위원회에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신청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김 씨의 인사 조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안산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부패방지위원회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안산시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그러나 안산시는 과태료 부과 오히려 부당하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한 안산시는 다

시 항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김 씨의 제보로 안산시장과 용역업체간 비리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으며, 검찰의 내사 결과 안산시장은 종합운동장 설계와 관련해 용역업체로부터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4년 5월 불구속 기소되어 2005년 1월 7일 2천만원 추징과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후 김 씨는 참여연대와 함께 안산시장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과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2004년 10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인 안산시장이 원고인 김씨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파기하고 일부 명예훼손만을 인정하여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시는 위원회의 원상회복에 상응한 인사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다가 법원의 과태료 확정판결(2004년 7월 19일) 이후 2004년 9월 1일 자로 김 씨를 본청으로 원상회복 조치하여 안산시청 건축과에 전보시켰다. 그러나 결국 민사소송 2심 이후 김 씨 스스로 공직을 떠났다. 송진섭 전 안산시장은 2012년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용호 씨의 지방공사 의료원 비리 고발

충남 서산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 공공기관이다. 서산의료원에서 원무과장 및 총무과장을 지낸 지용호 씨는 2002년, 당시 첫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에 서산의료원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장의업자에게 65평의 영안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아, 평당 200만원으로 임대료를 계산한다면 5억 원 상당의 수입을 저버려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장의업자 녹취서, 의료원 사업 세입세출 예산서등 12종류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공익제보하였고, 이는 부패방지위원회 공익제보 1호가 되었다. 지용호 씨는 1994년 서산의료원이 ‘선 납품 후 계약’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며 약품의 재고도 맞지 않는다고며 충남도에 의약품 관련 비리를 진정하기도 하였다.

그는 두 차례에 걸친 파면과 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겨 원직 복직되었으나, 그 간의 투쟁 과정을 담은 책을 발간한 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다시 당하며 강제 퇴직되었다. 이후 그는 소송을 모두 포기하였다. 지금은 미국을 오가며 여러 일을 하고 있다.

진웅용 교사의 사립학교 비리 고발

진웅용 교사는 2002년 용화여고 국어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를 비판한 이유로 퇴학 명령을 받은 학생을 위해 구명 운동을 주도하는 등 학내 비리를 밝히는데 앞장섰다가 2003년 10월 파면되었다. 학교 측이 내세운 파면 사유는 '무단결근' '불성실 수업'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등 여러 가지였으나, 몇 년 동안 진 교사가 학교 재정 문제 등 법인과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자 못마땅하게 여긴 학교 측은 퇴학 학생 구명 운동에 적극 나선 이후 그를 파면시켰다.

파면된 이후 진 교사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학내외에서 촛불 시위 벌이는 등 학내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쪽에 복직을 권고했으나 재단이 따르지 않았고 이에 다시 교육부의 결정으로 2004년 복직이 결정되었다.

2003 - 2007
참여정부 시기



고성군청 이정구 씨의 군수 비리 제보

이정구 씨는 강원도 고성군청 8급 공무원으로 2003년 1월 함흥군 고성군수가 민원인의 땅을 직접 사들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민원인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실을 폭로했다.

이 씨에 따르면 고성군수는 건축을 불허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류까지 위조했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시키기 위해 준도시 지역을 준농림 지역으로 둔갑시키고 조례에도 없는 해안경관지역을 만들었다. 그는 관련 공무원들이 동조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서류와 녹취록을 준비하는 등 증거수집에 나섰으며, 민원인의 정보 공개 요구를 군청이 묵살한 것에 대해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원인 편에 섰다.

이 씨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민원인을 위해 건축 불허 처리 과정의 부당함을 증명했지만 강원도청이 고성군의 서류를 정당하다고 인정해 민원인은 패소하고 말았다.

행정심판 이전인 2003년 5월 이 씨는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군수의 비리를 증언한 군수 측근과 함께 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위원회 직원과 검찰 조사관은 “추후에 꼭 조사할 테니 기다리라”며 관련 자료들을 받지 않았다. 위원회의 연락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이 씨는 2004년 1월 양심선언을 한 후 위원회에 고발 내용을 다시 접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사 권한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며 상급 기관인 강원도청에 감사를 이관했으며, 결국 강원도청은 행정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군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고, 그 후 어느 기관도 군수의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재선된 함 군수는 건설관련 별 건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직위해제 및 파면을 당했으나 복직돼 현재 고성군에 재직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혈액관리 비리 고발

김용환, 임재광, 이강우, 최덕수 씨는 2003년 9월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와 B·C형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 수혈용과 의약품 제조용으로 공공연하게 유통한 사실을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하였다.

이들은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 운영과(김용환), 동부혈액원 운영과(임재광), 남부혈액원 검사과(이강우), 중앙혈액원 총무과(최덕수)의 직원이었다.

이들이 오염혈액 유통 등 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 관리 실태를 폭로하게 된 계기는 2003년 6월 한 방송사의 '혈액관리 부실 실태' 취재를 돕게 되면서 부터이며, 평소 혈액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변화할 조짐이 없자 언론을 통해 실태를 알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적십자측이 이들을 찾아내어 처벌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조직 내 움직임에 불안해진 이들은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부패방지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위원회는 9월말경 적십자사의 부실 혈액 관리 실태를 부패행위로 인정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와 내부 조사 결과 오염된 혈액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6명, 간염을 얻은 사람은 10명,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도 4명이 확인됐다. 매독균에 감염된 혈액이 유통된 사실도 적발됐다. 적십자사는 이런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도 한 동안 숨겨오다 일부 언론의 보도로 뒤늦게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적십자 측은 에이즈환자 비밀누설혐의로 이들을 고소, 2003년 12월 4일 긴급 체포되었지만 감사원 특별감사에 의해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밝혀져 바로 검찰의 불구속조치로 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적십자측은 이들을 “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 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적십자사는 이후 이들을 내부고발자로 인정, 보호해야 한다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계를 철회하였다.

이들의 제보로 인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이 설치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인 혈액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혈액안전관리에 진전이 있었다. 김용환 씨는 현재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동일여고 교사들의 사립학교 비리 고발

박승진, 음영소, 조연희 교사는 학교법인 동일학원에서 근무하면서 학내의 각종 회계 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2003년 5월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특별감사를 이끌어 내어 16억원의 회계비리를 밝혀냈다. 그 결과 61건의 행정상 조치, 15억 5천 여 만원의 재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의 조치라는 엄청난 특별감사처리지시와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 5명은 형사 고발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다.

과거 동일학원 재단의 재산 증식을 위해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학교 교육 환경은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학생회장 선출의 직선제, 현장학습의 질 향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의 기회 확대, 학교회계 예결산서 공개, 각종 협의기구의 실제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상자 3인을 포함한 30여명의 교사들이 헌신적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동일학원 재단은 교사들을 불법집회·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들이 기소되자 2006년 6월 파면했다. 박승진, 음영소 교사는 무죄판결로 인해 복직했으나 조연희 교사는 파면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2012년 박노현 전 교육감은 조연희 교사를 특별채용하려 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김동섭 이사장은 2006년 벌금형 선고이후 2009년 교장으로 취임했다.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연구비 횡령 고발

김이섭 연세대 독문과 강사는 2004년 1월 연세대 홈페이지에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연속으로 올려 독문과 교수들의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횡령 의혹을 폭로했다. 이어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과 연세대 총학생회, 연세대 대학원총학생회 등은 독문과 교수 5명을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 독문과 교수 5명 중 3명의 ‘연구비 유용 혐의’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벌금 1천만원, 벌금 5백만원, 기소유예 판결을 각각 내렸다. 이어 연세대는 지난 1월 해당 교수들에게 정직 2개월, 견책, 구두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당초 해당 교수들의 퇴직을 요구했던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과 연대 총학생회, 연대 대학원총학생회는 지난 1월 학교 측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며 강력 반발하였다.

그러나 학교 징계가 끝난 해당 교수들은 강의를 시작하는 등 제자리로 돌아왔으나 정작 사건의 공익 제보자인 김 씨는 2005년 이후 강의를 맡지 못했다.

김중년 행정실 주사의 영덕여고 비리 고발

김중년 씨는 2004년 12월 1일 경북 영덕여고 박 모 이사장이 지난 1998년부터 2004년 까지 4년 여 에 걸쳐 1억 1천 7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 제보하고 국회기자실에서 언론에 공개했다.

김 씨는 경북 영덕여고 (학교법인 조양학원)에 26년간 재직한 행정실 직원으로서, 박 이사장이 학교운영비 및 특별지원금의 사용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이 직접 공사물품 구매, 단가 조작, 수량 부풀리기, 물품구입 허위 서류작성, 도로공사 보상금 전액횡령, 개인자가용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등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비를 착복하고 있는 것을 알렸다. 박 이사장의 착복행위는 박 이사장이 교장으로 부임한 1989년 부터 있었고, 1995년에는 교장의 착복이 너무 심해지자 교사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교장의 반성으로 끝났다. 이후 문제제기한 교사들을 협박하고 행정실 단속을 더 강화했을 뿐 착복은 계속되었다. 2000년도에는 자기 아들을 교감으로 앉히고 교장 자신은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착복은 계속되었다.

김중년 씨는 2004년 6월 박 이사장의 비위사실을 정리한 내역서를 영덕여고 선생님들에게 폭로하고 비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건의하였지만 교장, 이사장의 아들인 교감, 행정실장을 비롯하여 협박과 회유가 이어졌다.

이 동안에도 김 씨는 학교 측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학교는 협박과 회유가 통하지 않자 김 씨의 집에 찾아와 늑스신 아버지를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고발로 박 이사장은 2005년 2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대구지법에서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처벌을 받았고 검찰, 도교육청은 1억6천3백여만원의 횡령액을 확인하였다.

2005년 3월 1일 자로 감독청인 경북교육청은 영덕지역의 인사를 중심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하였고 현재는 임시이사들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이사장의 유죄판결 상황을 인터넷에 알려져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임시이사들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0월 28일 해임되었으나, 대법원의 복직판결로 2008년 복직하였다.

조태욱 씨의 KT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조태욱 씨는 2004년 5월 KT가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상품 판매를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허위매출 실적을 올렸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렸다. 이 일로 인해 KT는 통신위원회로부터 29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당시 KT는 매출액 확대를 위해 직원들에게 전화판매를 할당했고 직원들은 일단 자기 봉급으로 휴대 전화를 사서 책상 속에 넣어놓았다가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명의 변경을 해주거나 직원 한사람 앞으로 수 백 개의 전화를 가개통하기도 했다.

당시 조 씨는 언론사에게 자료를 제공했고, 그는 2004년 8월 21자로 해고되었다. 조 씨는 그 다음 날인 22일부터 72일 동안 청와대와 정보통신부 앞에서 각각 두 시간씩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에 대해 경기지노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조 씨는 같은 해 12월 복직했으나 2010년 4월 다시 해고되었고 현재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상근 KT 지부장의 예산낭비 고발

여상근 씨는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에 KT가 고시 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국가예산을 약 6백억원을 낭비했다고 신고하였다.

여 씨는 KT에서 31년간 재직하면서 부장급 직위까지 승진했던 전기기술자이다. 2004년 지부장으로 부임 후 고속철도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압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전압 대책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잡음전압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에 예정된 공사에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낭비된 예산을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공고를 졸업한 비전문가가 라며 묵살했고, 여 씨는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에 고시 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국가예산 약 6백억

원을 낭비했다고 신고했다. 위원회는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했고 감사원에서는 향후 공사에서는 예산 낭비가 우려되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기 예산으로 구매한 부동산을 국가 소유로 이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여 씨는 신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회사가 감사원의 감사과정에 감사관을 기망한 부도덕한 행위를 발견해 재신고 하기도 했다. 여 씨의 제보는 국가예산을 아끼고 기업윤리경영에 기여하였지만, 정작 그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지 6일 만에 파면당했다. 파면 뒤 당시 청렴위원회가 KT측에 파면취소를 권고했으나 KT는 불복했다. 이후 KT는 여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의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문제점 지적 1인 시위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는 중앙도서관 신축(2002년 10월 7일 준공)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1인 시위를 2005년 5월 9일부터 2010년 5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12시에 벌였다.

박 교수는 당초 지방서에는 국내산 석재로 시공토록 하고 있으나 당시 양형일 총장의 지시로 내외벽과 바닥 계단 등에 국산석재대신 값싼 저질의 중국산 석재를 사용했음에도 재료비는 감액하고 인건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오히려 원 지방서 보다 약 2,400여만원 높게 시공되었고, 그에 따라 수 억원의 교비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당시 조선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당시 양형일 총장을 고발했으나 총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연구원의 황우석 박사 관련 PD수첩 제보

○○○씨는 2004년 가을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를 찾아와 '당시 황우석 박사 연구의 난자 제공 과정에 문제가 많고 실제 연구 성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거품이 많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씨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이었다. 이후 2005년 6월1일 PD수첩 제보란에 황우석 교수와 관련한 제보를 했다. 제보의 내용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매매 난자와 연구원의 난자가 사용됐고,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PD수첩 취재팀은 참여연대에서 독립한 시민과학센터 담당자와 함께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이후 6~7개월 동안 확인했다. PD수첩은 10월20일에는 미국 피츠버그대학에서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공동 저자인 김선중 연구원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김선중 연구원으로부터 2005년 논문에 대한 '중대한 증언'을 들었다. PD수첩은 2005년 11월 22일 '황우석 신화의 난자의혹'을 방송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4일에는 황교수가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연구원 난자이용' 및 '난자매매' 사실을 시인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황우석 박사는 우리사회의 성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화적인 인물이었고 국민적 지지도 상당했다. 방송의 후폭풍은 상당했으며 다른 주류언론의 황우석 박사에게 유리한 보도가 이어졌다.

오히려 12월 4일 YTN이 MBC <PD수첩>의 연구원 K씨의 인터뷰과정에서의 취재윤리위반을 문제 삼은 보도 이후 황우석 사태의 본질보

다는 취재과정을 문제삼는 여론이 커졌고, MBC의 사과도 있었다. MBC와 PD수첩에 대한 적대적 여론과 네티즌들의 요구에 의해 MBC와 PD수첩에 대한 광고철회와 방송 중단도 이어졌다. 이후 황우석 연구팀과 PD수첩의 진실공방, BRIC의 젊은 과학자들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부속서의 중복사진 확인, 김선중 연구원의 또 다른 증언 등으로 인해 결국 2005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에서 확립했다고 주장했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교수는 '원천 기술'을 계속 주장했지만 2004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은 물론 영롱이부터 스니피에 이르는 그의 복제 연구 성과까지 의심을 받게 됐다. 12월 15일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줄기세포가 없었다"는 발표는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23일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의해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고의로 조작됐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혹이 입증되었다. 29일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2005년 사이언스 관련한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는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고 30일 추가로 "2004년 줄기세포 또한 환자 DNA와 다르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황교수측의 원천기술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2006년 1월 10일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황우석 교수의 2004년 논문 역시 2005년 논문처럼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으며, 원천기술 역시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경욱 씨의 ‘밀라노 프로젝트’ 횡령 고발

박경욱씨는 대구지역의 전략사업이자 국책사업으로 채택된 밀라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근무자로 2006년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보조금 횡령을 통해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연구개발비를 유용하는 등 부정비리를 저질렀다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조합의 정부지원금 불법비자금 조성, 특별회비 수입 위조, 각종 행사에 관계공무원의 금품수수, 간부의 업무추진비 지급을 위한 출장서류 조작, 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장비도입 등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는 33개 연구 과제를 수주한 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원인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인건비 5억 8천 3백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 전·현직 임원들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구속 1명, 불구속 3명)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씨는 현재 한국매션센터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전응섭씨는 2005년 6월 22일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광주 여상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다. 인화학교의 학부모 조규남씨가 딸의 또래 친구인 A 양이 행정실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전응섭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2005년 7월 28일에는 광주지역 26개 시민단체들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가 구성됐다. 2005년 11월 1일에는 「PD수첩」 ‘은폐된 진실 -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이 보도되었다. 방송내용은 피해자는 12명의 여학생이고 가해자는 8명의 교직원과 교사였고, 정신지체 장애인인 부모 아래서 자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 청각 장애인 A양이 방과 후 과자를 준다고 행정실로 부른 교직원 K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고,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교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었다.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학부모회와 성폭력 상담소가 진상 조사 피해자인 12명의 여학생, 가해자로 추정되는 8명의 교직원이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방송 이후 11월 17일 당시 재단 이사장의 차남인 행정실장 김모(61)씨와 기숙사 '인화원'의 생활지도교사 이모(38)씨가 구속됐다. 2006년 재단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242일 간 지속됐으며 2006년 8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인권위는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교장 김모(63)씨 등 이전에 구속된 2명을 포함해 6명의 교직원에 대한 추가고발이 이뤄졌다.

2007년 중·고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천막수업 진행 등 학교에 대한 항의는 이어졌으나 재단은

바뀌지 않았다. 공모로 새로운 교장이 왔지만, 학생들이 항의의 표시로 계란과 밀가루를 던졌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폭행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학생 성폭력 혐의로 직위해제되었던 교직원 은 2007년 6월 13일 복직되었다. 오히려 대책위에 참여하였던 선생님들은 파면 임용취소,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고, 전응섭 교사도 대기발령 조치 후 결국 해임했다.

인화학교 김모 교장(2009년 9월 사망), 행정실장 김모 씨(63), 교사 전모 씨 등 6명은 청각·지체장애 학생 9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최종 형량은 실형 2명, 집행유예 2명, 공소시효 소멸에 따른 공소기각과 불기소 2명이었다.

2009년 공지영 작가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소설 도가니를 출간했다.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가 개봉했다. 인화학교 사건이 소설과 영화로 알려지자 대중의 분노가 일어났다. 특히 영화 개봉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재단설립취소와 재수사, 성폭력범죄 공소시효폐지 등 요구가 빗발쳤다.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던 2명의 전직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형사입건 방침을 밝혔다. 2011년 11월 18일 인화학교의 재단인 우석재단에 대해 설립취소가 결정되었다. 국회에서는 장애인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보자인 전응섭 교사는 2007년 해임되었으나 소송을 통해 복직했고, 현재 인화근로시설 지도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양시경 감사의 JDC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양시경 씨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로 재직 하던 중 2006년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JDC가 평당 8만원 정도인 제주헬스케어 사업부지를 15만원에 매입해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려했다고 폭로했다.

30만평에 이르는 부지의 토지감정가 과다책정으로 인해 200억원의 세금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다. JDC 이사회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양 전 감사의 해임을 요청해 건설교통부는 내부기밀유출을 이유로 2007년 3월 양 씨를 해임시켰다.

이후 양 전 감사의 문제 제기로 헬스케어타운 땅값 부풀리기 파문이 커지자 건설교통부와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벌여 '의혹이 없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양 씨는 2007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해 2008년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건설교통부와 JDC 측의 항소로 4년간의 법정소송을 진행했다. 2010년 5월 19일 서울고법은 “양 전 감사가 제기한 문제가 진실에 부합돼 해임사유가 되지 않고, 해임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JDC는 양 전 감사가 감사직으로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임금 등 1억2천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0년 9월 대법원이 JDC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승소가 확정되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김용철 변호사는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50억원 비자금을 폭로했다. 폭로 내용에는 김 변호사 자신이 2007년 10월 삼성그룹의 구조본부 법무팀장으로 삼성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고위 검찰 간부들에게 로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폭로를 계기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특검 수사로 이진희 회장 등 10명이 기소되자 이 회장은 회장직을 내놓고 퇴진했다. 2009년 8월 이 전 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행위가 배임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특검수사는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발 당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악의적인 보도로 인신공격에 시달리기도 했던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비리를 공론화시킨 것으로 나의 역할은 끝났다. 더 이상 내가 할 말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김 씨는 광주교육청 감사관(개방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 이진희 씨는 2010년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권태교 씨의 버스회사 요금 횡령 제보

권태교 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07년 버스 회사측의 버스요금 횡령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방송에 제보하였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뒤 민간운수업체는 서울시와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구조를 악용하여 현금 승차비를 빼돌려 세금을 횡령했다.

현금 승차를 할 경우 서울시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버튼을 눌러야만 요금이 집계된다는 점을 악용, 버스회사가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낸 승객 수를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대신 바둑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현금 승객을 축소 보고해 그 액수만큼을 횡령한 사실을 고발한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예전과는 달리 버스요금 집계소에 사

각지대 없이 24시간 지켜볼 수 있는 CCTV를 달아 버스회사들의 현금 횡령 가능성을 방지했다.

그러나 버스회사는 버스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등을 분석하여 권 씨가 내부고발자임을 알아낸 뒤,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내세워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권 씨 제보로 서울시는 버스업계의 비리를 바로잡았으나, 권 씨는 이후 버스·택시업체를 돌아다니며 30여 차례 이력서를 냈지만 업계에 퍼진 소문으로 그의 재취업 길은 가로막혔다. 다행히 민주노동당 서울시위원의 협조 및 공익제보자모임의 지원 등으로 버스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었다.

황규한 전 이스라엘대사관 참사관의 대사관 내 비리 공익제보

황규한 씨는 2006년 3월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 한국대사관 파견관(4급) 참사관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2006년 2월 근무 준비 중 전임자를 통해 현재 거주할 집을 임차하였는데 2007년 3월 집 수리 문제로 현지 임대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2006년 3월 현지 대사관 등의 공급으로 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1년 임차료 3만 달러 중 1만 8천 달러가 계약서 상으로 업(up)계약되어 증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국정원 등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 과정을 승인한 외교부와외의 마찰 등을 염려한 때문인지, “전임자를 도와 조용히 해결하라”, “대사관에 알리지 마라”, “개인 차원에서 검찰 고발하라”, “문제발생 주택에 후임자를 승계시켜라”라는 지시를 하고, 전임자 소송과 해당 주택 임대료 문제 등으로 귀임할 사정이 되지 않아 파견근무 연장을 요청한 제보자에게 2007년 6월까지 귀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황 씨는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에 불응하다 2007년 12월 20일

징계 해임되었다.

이후 전임자는 기소 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황 씨는 2007년 8월 당시 국가청렴위에 〈국정원 내부비리 고발 은폐〉건으로 신고하여, 2012년 6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전임자가 무마 명목으로 제보자의 계좌로 보낸 9천 불(문제되는 1만 8천불의 절반, 제보자는 2007년 국정원에 반납)에 대한 신고 보상금으로 2백 2만 6천 원을 받았다. 또 외교 통상부는 사건 이후 재외공관에 이러한 사건을 소개하고 계도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막상 본인은 복직은 물론 퇴직연금 또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전개하여 승소하였으나, 국정원은 당시 항의 차원의 사직서를 낸 것을 근거로 해임이 아니라 의원면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황 씨는 당시 의원면직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며 다시 의원면직 무효확인 소송을 전개하였으나 의원면직은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종 각하되었다.

2008 - 2012
이명박 정부 시기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김형태 교사는 2008년 4월 서울시교육청에 서울 양천고의 정 모 재단 이사장 등이 학교 돈을 횡령하는 등으로 수십 억 원을 챙겼다고 신고했다.

김 씨는 서울교육청에 양천고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의 횡령이 있었다며 300여 페이지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횡령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부당 취득한 돈을 환원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라”며 관련자들에게 경고·주의를 주는 선에서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학교 측에 제보자가 김 씨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는 이듬해인 2009년 3월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됐다. 이후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복직했지만, 학교는 5일 만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비공개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고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을 학생에게 나눠줬다는 등의 이유로 김 씨를 다시 파면했다.

김 씨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양천고 비리 의혹을 고발했지만, 사건을 맡은 양천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3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고검에서도 정 이사장이 개인 벌금 수백만원을 학교 돈으로 낸 것 등 일부 혐의만 적용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 씨는 218일간 남부지검과 양천고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교사는 이후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강서 양천 영등포 교육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교육의원 당선 후인 6월 28일, 남부지검이 양천고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했고, 2010년 9월 3일 정 이사장에 대해 “사실상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급식업체를 통해 급식대금을 빼돌려 5억7000만원을 챙겼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이사장은 학교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로부터 6,500여만원을 받고, 학교 돈 4,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11월 7일 김 씨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청심사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과중한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대운하 관련 양심선언

김이태 박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원으로 2008년 5월23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4대 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건기연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던 양심선언 당시에는 “징계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7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에는 “개인적인 주장으로 건기연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며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했다.

건기연이 뒤늦게 김 박사에 대한 징계에 나선 것에 대해 “제2, 제3의 김이태를 막기 위한 권력기관의 협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0년 10월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건기연 국정감사에서는 건기연이 징계이후에도 조직

적 탄압을 반복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기연은 김이태 연구원에게 외부접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사직을 강요했으며, 양심선언에 대한 해명서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릴 것을 종용 했다고 한다.

또한, 연구수행에서 배제하여 인사평가 결과를 통해 해고하려 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건기연이 김 연구원에 대한 보복행위를 반대해온 노동조합을 탄압해온 것도 알려졌다. 비리로 노조에서 영구제명 되었을 뿐 아니라, 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벌금까지 선고 받은 전 노조위원장을 감사팀장으로 임명해 노조관련 감사를 맡기는 등 노조탄압이 극심해 2008년 90%가 넘었던 노조가입률이 15%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징계와 전보 등을 남발해 1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김영수 소령은 2009년 5월 참여연대와 함께 군납품비리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김 소령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사람은 전 해군본부 예산처장이었던 예비역 대령과 민간인인 군납업체 관계자들로, 고발에 앞서 군 내부에서 분명한 책임추궁이 이뤄지지 않자 군 검찰이 관여할 수 없는 민간인을 고발한 것이다.

2006년 당시 계룡대 근무지원 과장으로 근무한 김 씨는 부임 이전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시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이 정상가격보다 40% 이상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통해 수익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군내부에서 문제제기해 바로잡으려 했다.

또, 군 규정에는 물품구매시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천만원 단위로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부임이전의 계약시스템과 계약단가 등을 검토하여 비리행위를 발견한 이후 시장조사와 경쟁입찰을 통해 이후 7개월간 5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그러나 김 소령은 그 기간 동안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타 부서로 전출되어 사병과 책상을 같이 쓰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았다.

김 씨는 결국 2007년 2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제보했고 위원회는 조사를 벌여 막대한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9억 4,000만원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재조사 형식을 빌어 “당시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어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김 씨는 군내부에서 책임추궁이 불가능해지자 참여연대와 함께 당시 전역한 불법행위 관련자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을 납품했던 민간인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결국 대전지검에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리 하자 2009년 10월 MBC <PD수첩>에 직접 출연해 군납비리사실을 사실을 알렸다.

이후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2009년 12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현역과 군무원 등 31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6월 말 전역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되었다.

김동일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의 국세청장 비판

김동일 씨는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으로 2009년 5월 28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국세청이 지난 여름에 한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국세청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15일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전 계장을 파면했고, 같은 해 6월 17일에는 명예훼손혐의로 김 전 계장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김 계장의 사건은 조직의 부패 또는 모순을 외부에 알린 전형적인 공익제보와는 형태가 다르지만 조직이 내부의 잘못에 대해 성찰을 요구한 내부자에게 파면과 고소고발의 형태로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익제보에 대한 조직적 탄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상향도 모호해 처벌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명예훼손죄가 분명하다며 김 전 계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을 후 미국으로 도피한 한 전 청장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의 수사촉구서 제출과 민주당의 고발에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친고죄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한 전 청장 당사자의 고소도 없이 검찰이 나서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권권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초적인 비판조차 봉쇄하는데 검찰이 앞장서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0년 8월 10일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계장은 2010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과 파면에서 해임으로 정계가 완화되었다.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글이 거짓이라 할 수 없고, 국세청 등을 모독하기 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011년 11월 24일 대법원 판결로 복직이 이뤄졌다.

김종익 씨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폭로

김종익 씨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했다. 김 씨는 2010년 6월 29일 방영된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에 직접 출연해 정부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했다. 김 씨는 방송에서 “정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힘없는 국민의 밥줄까지 불법으로 끊어버리는 그 공권력을 저는 정말 고발합니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방송에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실이 수개월 간에 걸쳐 김 씨를 사찰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공직자의 사기 진작 기강확립 등을 목표로 하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전직 은행원으로 2005년 국민은행 퇴직 이후 국민은행의 하청업체의 대표였던 민간인 김 씨를 사찰했고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대표이사자리와 지분을 포기하게 했다. 또, 법인카드내역 등 개인비리를 조사했으나 여의치 않자 ‘취코’라는 동영상 채널을 개인블로그에 올려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공문을 통해 수사의뢰하여 기소하도록 했다.

경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광재 전 의원(현

강원도지사)과 동향인 김 씨가 이광재 전 의원이나 촛불집회를 지원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씨의 사찰사실이 공개되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 씨는 물론 여·야 의원과 그 주변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대상으로 사찰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사찰을 수행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영안·포항출신으로 영포목우회라는 조직 또는 그 조직을 이용한 비선의 권력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그 배후로 이상득 의원, 박영준 실장, 이영호 비서관 등이 지목되었고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실무자 몇몇 만을 기소했을 뿐 소위 윗선에 대한 수사 또는 규명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가 파괴되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사찰을 담당했던 실무자의 수첩에 청와대 보고 등 사찰관련 사실이 메모되어있음이 민주당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용석 교수의 ‘SK텔레콤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평가위원 로비 제보

이용석 교수는 2010년 7월 20일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당일 저녁 SK텔레콤 측으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이 된다면 ‘컨설팅’등을 통해 보답을 하겠다며 선정을 도와달라는 로비를 받았다.

이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참여연대에 제보하였고 이에 참여연대는 제보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후 2010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K텔레콤 박 모 단장을 뇌물공여의 사표시와 배임증제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은 전국 우체국 사이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차세대 기반망 사업으로 2010년 통신분야 최대 사업으로 모두 317억원이 투입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22일 4개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해 SK텔레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선정과 관련된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사업 전일 ARS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나 제보자는 선정 당일 저녁 10시에 SK텔레콤 측으로부터 연

락을 받았다. SK텔레콤 측이 뇌물을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업자 선정 이후에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접근했고 평가가 끝난 당일에는 평가에서 1등을 했다며 사례를 위해 방문하겠다고 연락하기도 했다. 이 씨는 2009년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의 턴키입찰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포함하여 참여 업체의 턴키 입찰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사실을 고발한 바 있다.

이 씨는 당시 고발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목련장을 받았다. 로비대상자가 공익제보자로 알려져 있음에도 SK텔레콤 측이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를 벌였다는 점과 이 씨 외에 다른 심사위원들도 로비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불법로비가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로비를 담당한 SK텔레콤 직원만을 기소했다.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고발

이두희 씨는 2010년 11월 4일 장로회신학교 신학과 재학 중에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의 특정 교과 출신 학생들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더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2010년 7월 23일 군목시험 1차(필기) 합격생 21명의 2차 시험(면접)이 있었고 면접이 치러진 국군수도병원 내 베테스다 교회에서 베테스다교회의 담임인 홍목사(중령)가 이 씨에게 면접에 응시한 1차시험 합격자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이하 통합 측) 학교 소속의 학생에게 “면접 볼 때 한쪽 주먹만 살짝 쥐어라.”, “통합 애들에게만 (이 지시를) 전해라,” “그 외에 아무도 (지시한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 씨는 자신 이외의 통합 측 응시생 6명에게 이를 전달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홍목사와 면접관이던 홍 목사는 통합 측 응시생 중 먼저 귀가한 2명 외에 나머지 5명을 부른 뒤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할 것’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이 웃을 벅게 된다는 말을 전달했다. 결국

2차 시험 결과 통합 측 학우 7명 중 4명은 불고, 이 씨를 포함해 면접 중에 한쪽 주먹을 쥐지 않은 학우 3명이 떨어졌다.

이후 군 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1월 8일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시험 면접 과정에서 특정 교과 소속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지원자의 양심선언과 관련, 부정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목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면접시험 전에 부정행위를 지시했다는 이 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홍 OO 중령의 행위들은 크게 형법상 제123조 공무원의 직권 남용죄와 제137조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군인 복무규율 제8조 ‘정직의 의무’, 제14조 ‘직권 남용의 금지’, 제32조 ‘종교 생활과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를 벌였으나 홍목사는 주먹을 쥐라고 지시 한 것은 면접 자세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뿐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국방부는 응시생의 ‘오해’로 결론 내렸다.

신춘수 씨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신춘수 씨는 철도공사의 직원이자 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고양차량지부 지부장)으로 2011년 5월 8일 부산발 서울행 KTX열차가 광명역 부근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을 일으켜 해당 객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에 대한 원인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신 씨가 제보한 사실은 해당 차량이 정비사무소(고양기지)에 입고되어 사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견인전동기 내 베어링이 완전히 녹아내린 상태’를 확인했고, 또한 해당 견인전동기는 차량 검수 규정에 명시된 ‘사용기한이 이미 지난 부품’이라는 사실이었다.

당시 철도공사는 “코레일측은 과열된 엔진을 식히기 위해 속력을 줄여 달렸을 뿐 엔진 고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언론사(MBC)는 해당 열차의 상태에 대해 철도노조로 확인을 요청했고, 철도노조는 KTX 차량의 검수(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고양차량지부(지부장 신춘수)에게 해당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부장인 신춘수씨는 해당 차량의 사고원인에 대한 사진을 입수하여 철도공사의 발표와는 달리 사고 차량의 상태가 견인전동기 부품이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마모됐고(베어링이 완전 고착), 해당

부품이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것 등을 확인하고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사진과 함께 철도노조 본부에 보고했고, 사진을 취재하고 원인분석을 요청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철도공사는 ‘철도안전특별대책’의 형식으로, KTX 운행 횟수를 줄여 KTX-산천을 정밀 조사토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구형 KTX-1 차량의 노후부품을 전량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철도안전특별대책에는 8일 사고차량의 견인전동기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무리하게 사용된 제품이었고, KTX-1 차량의 주요부품을 전량 교체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제보자의 제보가 옳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업무상 비밀과 정보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규를 위반했다며 8월 22일 신춘수 씨와 사진을 제공한 직원에게 각각 해고와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하였다.

신춘수 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12월 19일 징계결정을 원상회복토록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했으나 사장이 바뀐 후 복직 결정을 받아들였다.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유영호 씨는 군산의 고층아파트인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면서 잘못된 흠막이 구조물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 등 문제를 발견하여 시행사에 여러 차례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 또, 시행사가 지하층의 기초 말뚝 전체를 Ext파일에서 PHC파일로 바꾸는 설계변경을 요구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위해 재하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5월 유 전 단장, B주택건설 관계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재하시험을 했고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동 재하시험 결과에 따라 “PHC파일의 안전하중은 120t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종관입량이 1mm로 나와 시공관리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2009년 5월 25일 군산시 건축과에 방문하여 부실설계도서에 대한 현장상황보고 후, 사업계획 변경(설계변경)을 위하여 실시한 재하시험 결과의 문제점을 설명하였으며, 2009년 6월 1일 군산시장을 면담하여 감리사항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현장상황 보고를 했다.

시행사 측에서는 유 전 단장 때문에 설계변경이 미뤄지자 과잉감리로 치부하고 “유 전 단장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며 군산시에 총괄감리단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군산시는 감리회사의 감리단장의 교체를 지시했고 유씨는 해고되었다. 그 이후 시행사의 설계변경은 받아들여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40개월(2009년 4월~2012년 10월)에서 30개월(2009년 4월~2011년 9월)로 10개월 줄었다. 시행사는 설계변경과정에서 재하시험 등 각종 안전시험을 다시 거쳤다고 주장하나 재하시험을 주관하는 토목품질시험 기술자가 현장에 오지 않았다.

2010년 12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군산시는 시행사가 신청한 공사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처리하여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자 명의 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주택관련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등 5명을 문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혀 유 씨의 제보사실을 확인하였다.

시행사는 유 씨를 상대로 22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손해배상소송은 시행사가 취하였다. 시행사가 유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진정한 사건도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군산시의회는 2012년 9월 13일 본회의에서 ‘공동주택조사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이하 ‘조사특위보고서’)를 채택하여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부실을 인정하고 ①공익제보자 유영호 전 감리단장에 대한 명예회복, ②책임감리 소홀에 대하여 감리회사 및 시공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③건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과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을 시정할 것을 군산시에 요구했지만 아직 시는 시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윤승훈 씨의 서울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전류사고 제보

윤승훈 씨는 서울도시철도 직원이자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조합원(선전홍보국장)으로 5호선 발산역에서 2009.11.18. 공익요원이 급속으로 된 줄자로 스크린도어 바닥판과 전동차 사이 간격을 측정하던 중 스파크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2009.11.26. 장애인 전동휠체어로 승차하던 중 스파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9.12월말 경부터 발산역을 포함하여 5, 7호선 역을 대상으로 절연작업 등 보완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였으나, 2010. 5.10. 왕십리역에서 장애인의 전동휠체어가 후진으로 열차에 승차하던 중 휠체어 앞바퀴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바닥판 사이에 빠지면서 스파크가 발생하고, 3cm가량의 구멍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

윤승훈씨의 제보로 KBS는 전동차와 PSD발판 사이에 스파크 발생에 대하여 취재하였고, 2010.8.19. KBS기자와 전문가(김준오 교수)가 현장취재를 거쳐 2010.8.23. KBS1TV 9시 뉴스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잇따라」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에 전기가 흘러 사고 위험이 높다는 내용으로 서울도시철도의 시설관련 문제점이 KBS뉴스에 보도된 이후 윤씨를 직무의무 위반, 공사의 위신 손상을 이유로 파면하였다.

노동조합은 윤 씨가 선전홍보국장으로 언론, 매스컴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등을 주요업무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는 자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방송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차적 책임은 방송사에 있고, 이를 근거로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출했고, 과거 언론취재 지침 위반으로 받은 감봉징계처분과 파업전력까지 거론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고 윤 씨는 복직 소송을 진행하다 2012년 4월 행정법원에서 승소하여 복직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공사는 법원이 사규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인정한 점과 2010년 윤 국장과 동일한 건으로 '정직 1개월'을 받은 양모 당시 역무지부장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직 2개월 만에 재징계에 착수해, 8월 다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12월 현재 윤 씨는 정직 2개월 후 복귀하여 또 다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비위행위 제보

이상돈 씨는 정부(지식경제부)와 광역자치단체(인천광역시)가 출연한 기업 기술지원 공공기관인 (재)송도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4,200여건의 허위시험성적서, 기술지원 수수료 미수금 방치, 90억원 상당의 국가장비 영터리 관리(2년 9개월 기간의 장비점검일지는 3~4시간 만에 허위 작성), 고가의 국가장비 타기관 차고에 방치, 연장근무 수당 체불 등을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 및 방송, 언론에 제보하였다.

이 씨는 2009년 7월 경력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입사 2개월 후 장비 재물조사업무를 하면서 송도테크노파크의 장비 대장목록과 실제 보유 장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다수의 장비들은 기기의 표준 명칭과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장비 대장목록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보유가 확인되지 않는 장비들도 있음을 발견해 부서장에게 보고했다. 부서장은 함구하라고 지시했으나 이 씨는 행정실에 보고했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또, 장기미수 채권(미회수 기술지원료)들이 대손처리 조차되지 않고 그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묵살 당했다.

이후 이 씨는 입사 후 3개월 21일 만에 수습평가에서 등급을 낮게 받아 해고되었다. 이 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송도테크노파크는 심의 하루 전날 복직명령을 내려 구제신청이 각하되게 하고 2010년 1월 14일 동일부서 동일직급으로 재임용했으나 일방적으로 급여를 20% 삭감했다. 이후 최초 해고와 같은 이유로 2010년 2월 16일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 씨는 4,200여건의 허위시험성적서, 기술지원 수수료 미수금 방치, 90억원 상당의 국가장비 영터리 관리, 고가의 국가장비 타 기관 차고에 방치, 연장근무 수당 체불 등을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에 2010년 4월 12일 신고하고 방송, 언론에도 제보하였다. 이 씨는 2010년 5월 17일 자로 면직되었다. 이 씨는 송도테크노파크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되기도 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되었다.

이 씨는 2012년 현재 인천광역시와 인천교육청 감사옴부즈만(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등 공익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살처분 허위신고 권익위 공익신고

박재운 씨는 2011년 1월, 경기 포천시 소재 육가공업체인 청미원 영농법인이 운영하는 양돈농장에서 농장장으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을 하고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면서, 3개 직영농장 및 15개 위탁농장의 실제 살처분 돼지 두 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포천시 등에 보상금을 청구한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영농법인이 컴퓨터 조작 등을 통해 살처분 두수를 부풀린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2012년 1월 25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해당 업체는 구제역 의심 돼지 2만 68마

리를 살처분 매몰했으나 포천시에는 9천500마리나 많은 2만 9570마리를 묻었다고 신고했으며, 매몰 돼지들의 체중과 나이도 속이는 등으로 보상 예정액 104억 원 중 28억 원이 부풀렸다고 밝혔다. 결국 영농법인 간부 및 농장대표, 공무원 등 15명이 기소되었다.

공익신고 이후 고초가 따랐던 것은 물론이다. 박재운 씨는 스스로 퇴사했으며, 그와 함께 협력하던 직원 2명 역시 반강제적인 권고사직을 당했다.

박재운 씨는 고향인 전남 담양에서 농장을 준비하고 있다.

홍서정 씨의 학교 내 종교수업 강제에 대한 언론 공익제보

홍서정 씨는 종교사학인 명지고 1학년에 재학하던 2012년,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 교과목이 없이 운영되어 사실상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학급비로 현금 납부 등도 진행되고 있다며 2012년 7월 18일 서울시 교육청에 제보하였고, 한겨레신문에도 제보하여 보도가 되기도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보 접수 후 학교에 사건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홍서정 씨는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에 출석, 증언하였다.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 안착화를 위한 컨설팅 강학을 실시하였고, 학교 측은 9월 대체 교과목을 설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 약속을 하였다.

문제는 제보 이후였다. 명지고 측은 “본인이 싫으면 학교를 나가면 되지 않나”라며 전학을 종용

하거나 학교 이미지를 망가뜨렸다는 무고한 비난을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조사를 진행하여 결국 신분이 드러나게 되자, 몇몇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들어와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하였고, 홍서정 씨와 부모님을 불러 면담을 진행하고, 신앙심이 깊은 학부모들과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압박을 행사하였다. 마련된 대체 수업 또한 홍서정 씨 혼자 듣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홍서정 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하였다.

현재 홍서정 씨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나라’ 운동본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등에 참여하는 등으로 학교 밖의 생활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심태식 · 민경대 선생님의 학교 물품구입 등 부정행위 지속적 감시제보활동

심태식 씨는 37년 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2010년 9월 퇴임한 분이며 민경대 씨는 현 초등학교 교사이다.

이들은 2004년 2월 재직하고 있던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교무실 사무집기 등을 시장가의 3배 가격으로 구입/전자입찰 피하러 1000만원이 안되게 쪼개 수의계약)를 교육청 등에 스스로 공익제보하였다. 해당 교장이 정직 및 전보조치 받는 등 성과를 내자,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분석 제보하여 부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 왔다.

이들이 2012년까지 문제제기 및 공익제보 한 곳은 서울 시내 초등 및 중학교 20곳 이상이다. 문제제기 이유 또한 조달구매, 정직 교장 출근, 교직원 연수시 약품판매, 단체체육복 강제구매, 시설바닥재 위해성, 캐노피 부실공사, 불법회계 등 매우 다양하다.

심태식 씨는 2006년 전교조 전국초등위원장, 2010년 서울시교육청 명예시민감사관을 역임하였으며, 민경대 씨는 2007년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전교조 초등관악동작지회 교권부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현재 다음 카페 <교육행정정보공개 맑은누리>의 공동 운영자이기도 하다.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양심선언

장진수 주무관은 2009년 8월부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에서 근무하다 2010년 6월 사찰당한 김종익 씨의 제보로부터 시작된 검찰 조사에서 민간인 사찰과 그 증거인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하여 증거인멸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장 씨는 2011년 1월 중앙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종석 행정관이 대포폰을 주었고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받아들여지는 기미가 없고 오히려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총리실 류충렬 관리관, 고용노동부 이동걸 정책보좌관 등이 여러 명목으로 돈을 건네며 회유하자, 2012년 3월부터 오마이뉴스 ‘이탈남’ 등의 언론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그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양심선언하고 최종석 전 행정관과 대화한 육성 녹음파일도 공개하였다.

장 씨의 양심선언으로 진상규명 여론이 확산되자 검찰은 3월 1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에 나섰고, 6월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장 씨에게 양심선언했던 핵심 내용인 대통령 인지 및 지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의혹 제기

이해관 씨는 KT새노조위원장이다. 이 씨는 KT가 2010년 연말부터 001-1588-7715라는 전화 번호로 진행된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가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고 주장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해왔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알일본 결과, 우리나라 국제전화회선의 규모 상 영국으로 걸 수 있는 국제전화가 하루 200만 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부 직원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되어, 이를 2012년 2~3월 언론 등에 제보하였다.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되자 KT는 내부 임직원에게 발송한 공지메일에서, 001-1588-7715를 통해 진행된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사실은 최종 투표 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 씨 등은 2011년 10월 24일에 착신된 통화사실 확인내역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명백히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씨는 4월 30일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하였고 권익위는 이를 공

정거래위 및 방송통신위로 이첩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제주참여환경연대 등과 이 씨를 도와 KT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에 신고하였으니 공정거래위 등으로 판단의 주체는 옮겨간 셈이다. 공정거래위는 아직 답이 없다.

공익신고와는 별도로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큰 획을 그었다. 공익신고 이후인 5월 7일 KT는 이 씨를 경기도 가평으로 무연고 전보 조치하였고,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에게 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불이익조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이 씨를 지원하여 5월 22일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는데, 국민권익위가 8월 28일 이를 받아들여 보호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특히 권익위는 재결서를 통해 "공익신고를 하여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공익침해행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좀 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보호조치 결정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재 KT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진행 중이다.

충주 소각장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공익제보

충주시 배출 쓰레기 소각 시설인 충주클린에너지파크에서 4조 3교대제로 근무하는 각 운영조의 조장 4명은 2012년 11월 1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을 통해 회사에서 2010년 하순부터 최근까지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도록 했다고 양심선언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위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특히 염화수소(HCl)의 농도는 20ppm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오염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굴뚝 중간 부위에 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되어 있는데, 회사는 염화수소의 농도가 최대 100ppm까지 상승함에도, 시설개선을 통하여 오염도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대신, 직원들로 하여금 TMS를 조작하도록 하여 인위적으로 HCl 수치를 20ppm 이내로 유지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제보 이후, 충청북도로부터 위 제보자 4명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되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초 소환 당시에는 피의자 자격이었으나, 녹색법률센터의 변호를 통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자격으로 조사받고 있다.

한편, 해당 소각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러한 조작을 지시한 상사와, 하청업체인 소속 회사, 그리고 원청업체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다.

아래는 2012년 네이버 해피빈 <의인상> 모금함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을 후원해 주신 네티즌 명단입니다.

12월 10일까지 820분이 후원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감은 감사 드립니다.

꺠 01gansoul 0419b 05353556 1210908 21hani_2861452 2dg2012 2mile_30822qls 318249 3589092 5-민음의 콩저금통 7096park 7259401 8kingssoul 96517838 96hye_가면특대 가슴이 가치주 발글 혁명가 간지작살원빈 갑갑한자90 갑글이 강민규 겔스유저 거북이와터프츠 김동이 경국대전 경마 고개너머 고평세마리 구름 구름세점 구름세점 구리 권골골 그니 그럭저럭 금메달 궁정 기상 김공유 김병 김보람 캄찍벤이 풍 풍세 끝판 끝꾸는갈매기 꿈의미남 ㄴㅇㅇㄴㅇㅇ 나그네 나니 난지 난행복합니다 날알고의 흥진호통 남남 남쓰 내일은레몬 냇물 냇 냇남 네프라타 넷버스터 녀리와 쟁이 노리게 녹작의맛 놀이날다 눈꽃송이 노노 노름나무 늘한돌림 닌쥬 닌 다검류망토 단립 달덩 달곰이 대박자루 덕후2세 도라에몽의 콩 저금통 도라지 도진 동 양 캄쉬 동구라동 돼지땀땀 두마리중환마리 들뜬론B1A4 딸기공주 도해와 도해와 뜨아스 따올 라디안 라미공과 랍이의 콩 저금통 레나르트 레몬의 콩 저금통 레미 로즈마리 볼플름 루리 루미노스 웨해 루네 리얼키움 리오로2 뽀뽀 만두양 말창 매드 매추 멜로썬 목빈썬 미래제국 미덕태양 미지 미친천사 미친팬터 미 파슬라 민봉이지 바 박영준 발렌티노 밤손 밤뜰 배다리 배배 범준아복스미 배이스김 벨베고르 빈백현손나디 별명 없음 보들레르 본 아이디 부지런한 게이분홍풍 불랑기525 불씨이 비엔 뽀짝이 사는동안 사랑이란 썬까 산자수명 살머니 삼각형타이어 상명하 세미린 샘 샤샤 샤기 서유하 서유사랑 선장수산 셀터비고 소녀감성 소년 소유만보다 손세이서린 속이 순둥이 술개 숨은천사 숭고 썬표 슈가볼 스름혼드 스타트기가 스텝 스태프 스타라크레프트 모금함 스파카사 승현이아빠 시간여행 시나브 신디제이 신우 신광구 심 재동 심시모 심미 썰빵 씨니 씨니호의 콩 저금통 썰빙비 11111 아다다스 아따오 아바노자루 아사이베리 아요기 아이 아이타크 아이통신의 콩 저금통 아이퍼버저 안드로메다 양마 알라송 양수음 어벤저 어플스토리의 저금통 엔젤비트 엘리오 여기서터디 연두부 연필깎는 백퍼센트 영화속도시 영화지기 오프리 오행사 올리브 왕입니다 외눈박이 우리 우정스케치 우주루 웃긴닷컴의 콩 모금함 ㅋㅋ 웃자 웰위즈드와 원팔콘 유배 유미 유미 유벤딤스 유성성대 유일 유원사 윤정 윤터걸 오강강 은 불 이민걸 이지열 인경진 인우 잇츠미 재범지기 겔썬 정영은 제시카 조아 졸리 주원라라기 줄줄이 줄줄이의 콩 저금통 지구 도우미 저금통 정징이vs맹진 폭지고민 쥘니 참치 채린이 천생 청마루 제로 초של 최승현 추방의 콩 한송,사랑 한송 춘년 치요 ㅋㅋㅋ 카곤의 돼지저금통 카레 카트동접기 코난 코봉이 코스모안의 콩 저금통 쿨디 크라운 크르소스 크라하 크르하 키르케 키아 강게이 타락 타루에 타임치과의 콩저금통. 탱구라라기 턱토리 톱 톱는 쿨라 투명사회 트루디 티나 페이 파도 파라독스 파르티 파라티 팬더 땀 땀땀땀 풀리 푸룬터다 푸시 풍댕이 프리 플라미트 플레어 피스메이커 ㅎㅎㅎ 하는 하는 하는플라미 하슬을 날던 인어 하루저금통 하마갈매기 하얏고찰진 하츠네쿠로 브름스터드 한당당 한송 해류 해울이 헤즈블라 헬렌비 웰스 현승이가 달라졌어요 현유니 해아 헬니 흥보대사3호 흥송호 훈 꽃터 희아 희인 히리 a Ball a2431 aaaaa3525 able_x aboutbag abraxas Absolute Zero Addiction adp725 ahrthf175 akaudghk의 콩 저금통 akdmafj AKON alba0708 Alex alex5136 amanyouu19 andante1029 ANNA Aplite aptx1982 asdfxczcv1890 Ashes Ashes Asita askmetheway ausyet axlow axv122 babylove Bad hat baekhyunjun2 barbul beautifulbels belovendi5 besbas14 bjs1156 Blacklist blagon1985 bluebird Bogus boidneh boikdisse bomin0410 bseng00 Buhung Taekwondo bureaucracy1 candled776 cave story cdh97070 cellnam chagayeon chemilife cheul365 cheumi1 chk05112 chloee115 chskqi chu0608 cjdhsksa33 clear8008 cmr1723 cms9910 CNBoice cndhuse5 councu create1319 cscheol96 cu987 cutygid93 d1 Dad dam b daldnsldn dbrnld dbsl686 ddalkice DDDHK dealer1102 delete1207 deluccilove dhkdwkwl8 dijespo dioshirdf DJ달구 djaio1028 dkdqmfak dkensplyd dkfj32 dkiosnd dkwk67 dfldhkl1020 dlrudrhkd dlsckd25 dlsgh7171 dlspp1828 dlwdjdqhr5 dlwvndks2644 dm472 dnmwd_wj douidckc DORIBARI dueihty5 dwlshgks dxt6ia dynamics77 e_r_i_c_a e3usa ebada1411 ecks2011 eg247 eg4120 ehtdnr8623 eiduytr ekfjdandfxb euehuh3 euichuio eunheng412 eyoscprt fg1541 fkdsl288 flowings fonpsm fpek11 fresh frfate fswkiy96 gamestar gayalpg gesom ggusehd12 ggyo23 ghkukil ghijq3192 Gibson ginseng_7 giyer602 gjdbswls15 gkawlgmfl6565 gktha468 gktdky12 gmlldh48622 gohjsm goldenweek21 gorns2011 goza_bim greysound gunny751 gurdlsme gwan8930 Hanah happylifesh heahja7 heavensbeach het673 hibi_hy04 hjysza hkinsam hksksh8552 hsy120417 huiocyte hundgre3 huyeyngh hwangmun11 Hya hyeri_hana의 콩 저금통 hyuidisne hyuytdse hywrnh idnseh ilval in4460 inmotion itop0819 iousht4 ipotency iq150mensa isee isee isee iudkwyx iwizl jaisrhk jdluijh jdsuyrbt jeojeo1 jihyun257 jinzhoujiong jins82 Joke joppw joukol joyoyeo Jrin js_m2846 jshyzzz jskwb jsl55358 jsurji jtwow326 juhwan_ juinbdsse jul1110 jumno jun2pang junhr45 juuu jwpdldptms K Hack k0127ha k5tgd486 kai_oppa kail8899 kaka1676 kangm8328 kbs07061 kcde keab12 kidusoeh kimdoolee7 kimgw547 kimhyeran63 kimsww6518 kingmmg kjs01234 kkh92633 kkhoi5 knb14 ksjkmk89 ktktda101 kuku714 kuzan kwang7466 ky590905 kysuus 19951129 la512973 lak5406 laksni00 larten7 lbvqcm6966 leehwangram leesang1007 leeyw2739 lhn0212 lilixiu lottenger lou_ise LOUHI lsk5588 lsy6804 lululu52 luxun luxun lxy3149 manuel many_many masca172 mehye0413 MGM가치노 min880404 minhanmr106 mik314 mister_z mmrg22 momomomoda Mr 스가이 mr6025 mu_nenad muitheskd mun062559 My J myapochanju mylucy1124 mytree0531 namsert NaNovin nyheloa ncw2009 neo5829 nk6734 noskrt Not even copy Nove nr nsy2378 nu7636 nuitdepolie o3o_seo7 okcomputerma onkiuer oo4465646 optungm_04 osjflm oyj193 paaet8 palpiot13 pandaleader panesi PANiC papermon parknaga1 passone85 pasteur8888 peace4141 pingkim7 pingkim7 pink_appy piopooow pjhwass4 pjw3604 Plapp plmplm111 postale pnpncy qkckznf0 qnsjtr20 qqql23 qrtwrtqr qwert qwnqq qytfdot radiostreet raul_411 re_power reedsun1176 reg5037 renoma0700 Respect K Rhksrudrhk7 richiji richmam50 Ring rkdgsurb83 rkrk9090 rladmstnr02 rlapgfla1993 rlarlws92 rlatjdai1234 rmtqkd001 rose5092 rudcj231 ruler7670 rvdnsu rnyansim samjoka0 scott31 sdcorp2 seathfink1 seattle seoptrade seuxet sexy_yeon_ sexymenpj89 sgths shadow9x shehdnd87 shudise shyonk11 sidoreds Sigalges sinsiulee6 sinw5949 sioxao sisk0553 Sist siuext skhyman1 smxah84144 snakehruin shgyn33 sodiuehu soidukd soniverse sotopt201 sora3191 soulmate5995 srxeutf ss0129ss seunkli3 ssssl21 ssung5862 starcraft 공저금통 starkiller1 style3924 suck_hjb1055 sudioxeu subhsh sijube sokulaf suktur sunandy sunflower sunup_blue supadope Su Surain suvvhdt swunt_t_cube t7p9adac21 tajoo011 tas505 tbqod1234 teewordls Thesign tinsyky77 tkadid30 tksh15 tldmst tlqjdwns12 tm3252 tmdtn99999 tngur7703 tmseon tnmwd1728tkf toby0106 tokoyosarang2 tokoyosarang3 toxhunt tprrtn0805 tsukima800 ttiosla tiyplk udc4 udngsiw ulzqa unsaint01 uyidseg kwakj vlxjky2000 vovo0905 vxzoxw0721 welspekon wgw0119 whdgh1719 whtrngml60 wjtns929 wjstkdfr789 wlfk1620 wlgn54955 wlsghks2357 wltqj822 wndusgm122 wnskfkdd9234 woguqlsla woojeong1223 wowgood wpgmldl2 wwssxxy xhxd0000 xkcllatmxhfl y_208 y50836 yayuyred ybr2828 yickrr2 ync32 yjsoor ykt3053 yooeun9212 yoy2655 yray8030 ytloh yubtlm yudnej yul0624 yyuidne yyyxs486 yyyxy8220 zinuggo zxaasqw1258 zxx0408



2012 공익제보자의 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이 자료집은 2012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와 의인상 시상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공익제보백서, 이문옥 감사관 양심선언 20주년 행사 자료집과
참여연대의 보도자료 및 백서,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